

일상에 스며든 마약 범죄... 지역 확산 '심각'

'마약 청정지역' 옛말...검거 잇따라 보호관찰 20대, 또다시 투약, 구속 도심 한복판서 마약에 취해 난동도 10년간 검거 광주 14배, 전남 5.4배 "마약류 관련 확실한 대안 필요"

광주·전남 지역에 마약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 도심 한복판 숙박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채 난동에서 난동을 부리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보호관찰 대상자가 마약을 재투약하는 등 일상에 스며든 마약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6일 법무부 산하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20대 A씨가 전날 필로폰과 모르핀을 불법 복용한 혐의(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 처벌법 위반)로 적발됐다.

광주보호관찰소는 A씨를 대상으로 약물 정밀검사를 진행해 적발, 구속하고 광주지검에 기존의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항정신성의약품인 마약을 구입해 광주주택가에서 친구들과 수십차례에 걸쳐 술에 섞어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보호관찰소는 A씨와 함께 투약한 친구 4명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날 오전 6시 50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숙박업소에서는 마약을 투약한

20대 B씨와 30대 C씨가 창가에서 난동을 부리다 끝내 1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소방당국이 미리 펼쳐 둔 에어매트로 떨어졌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고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의식이 뚜렷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B씨가 난동을 부린 객실 안에서도 C씨가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고 마약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가 발견됐다.

경찰이 B씨와 C씨에 대해 간이 시약 검사 등을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께는 영암군 삼호읍 소재 한 외국인 주점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 3명이 마약류인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구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마약 범죄는 지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광주에서 붙잡힌 마약사범은 지난 2013년 53명에 불과했지만 10년만인 2023년에 730명으로 14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남지역 또한 2013년 86명에서 2023년에 46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검거된 마약 사범 통계를 보면 광주는 2019년에 244명, 2020년 306명, 2021년 153명, 2022년 241명, 2023년 740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경우 2019년 219명, 2020년 278

명, 2021년 226명, 2022년 322명, 2023년 462명, 2024년 38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번 마약을 접할 경우 중독으로 이어져 끊임없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광주 마약 사범 재범률이 52.9%, 2022년에는 42.2%로 마약 사범

으로 처벌받은 이후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대 적발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마약 사범에 대해 체포 및 처벌도 중요하지만,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도 뒷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광주·전남 뿐 아니라 전국에 마약 재활·

치료 시설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사회가 지금처럼 혼란한 시기에는 마약에 의존하는 비율도 높아질 수 있고 마약은 초범이 늘어나는 만큼 재범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마약류 치료·재활에 관련된 시설 투자와 확실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운암도서관, 겨울방학 프로그램

겨울방학을 맞은 광주지역 초등학생들이 16일 복구 운암도서관에서 열린 겨울방학 독서교실에서 컵케익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전남 경찰, 수사권 조정 후 역할 커졌지만 '인권 침해' 여전

광주변호사회 사법경찰평가 발표 하위 광주 북부경찰·여수경찰서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을 가지며 역할이 더욱 중대해진 광주·전남 경찰이 고압적 태도와 적법절차 미준수 등 인권 침해를 비롯한 악습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6일 소속 회원사 151명이 광주·전남 사법경찰관 777명에 대해 작성한 평가표 총 1270건을 바탕으로 2024년도 사법경찰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령·공정', '친절·적법 절차 준수', '직무능력' 등 항목으로 평가됐으며 100점을 만점으로 전체 경찰관서의 평가 점수는 71.8점으로 집계됐다.

2024년 한해의 활동을 평가한 결과 우수 관서는 광주경찰청(76.8점), 광양경찰서(76.8점)인 반면 하위관서로는 광주 북부경찰서(53.8점), 여수경찰서(48.6점)로 큰 격차를 보였다.

하위관서들에서는 지역민이 피고소 당

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이 여전했다.

피고소인의 진술을 무조건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로 수사하고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인에게 반말과 하대를 하거나 변호인이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보내준 자료를 수개월째 확인하지 않거나 다시 요청하기도 했다. 심지어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전관을 변호사로 선임하지 그랬냐"며 헌법과 형사 소송 법규, 수사 준칙 등에 위배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하거나 참여권을 배제하기도 했다.

조사 입회 시 필요한 내용 메모를 위한 노트북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의자의 변호인에 대한 참여권을 배제하거나 변호인이 선임됐음에도 범칙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조사 중 미성년자인 고소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 후 수개월이 지나 전화로 항의하자 고소인을 소환해 조사하고 '죄가 좀 약하다'는 등 선입견을 나타내기도 했으며 고소한 지 9개월이 넘어서야 송치했지만, 그조차도 보완 수사 명령을 받아 다시 돌아왔으며 이에 대해 고소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아 물어본 사례도 있었다.

다만 이 가운데 모든 평가에서 고르게 호평을 받은 경찰관 3명은 실명을 공개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7팀 남대권 수사관, 광주 동부경찰서 수사1팀 박종필 수사관, 광주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2팀 이광범 수사관 등이다. 이들은 평균 97.1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고 친절·적법 절차 준수, 직무능력 영역 모두에서 점수가 높았다.

장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사의 첫 단계부터 공정하고 친절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며 "부정적 평가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해 공정하고 적법한 수사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

내일 무안공항 정부 행사로 개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이 오는 18일 오전 11시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정부 행사로 엄숙히 개최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족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전남도와 광주시, 무안군이 주관하는 이날 합동추모식에는 유가족 700여 명을 비롯해 정부, 국회의원, 지자체 등 1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모식은 (사)국가무형유산 진도 씻김굿 보존회 20여 명이 풍악에 맞춰 춤과 노래로 망자의 한을 풀어주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례로 시작된다.

목록에 이어 헌화식에선 희생자 179명의 이름과 공항 2층 계단에 포스트잇으로

남긴 조문객·유가족의 추모 메시지 등을 LED로 송출해 희생자의 넋을 기린다.

희생자 가족 대표와 내빈들의 추모사 후에는 '기억의 시간' 추모영상을 상영한다. 영상에는 사고 이후 국민의 성원과 조문행렬, 현장 수습활동, 고인 명복 기원 등의 장면이 담겼으며, 희생자 사연을 담은 유가족 대표의 편지 낭독도 이어진다.

'내 영혼 바람되어' 추모곡 공연을 끝으로 추모 행사가 막을 내리면 유가족들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 애도의 시간을 갖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유가족의 편에서 함께 슬픔을 나누면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전남도 차원의 역할과 정부 건의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승진청탁·뇌물수수'...전 광주경찰청장 판결 뒤집혀 무죄

브로커에게 승진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광주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치안감 A(60)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A 전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2월 광주 소재 한 식당에서 브로커 성모(64)씨에게 1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승진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에서부터 A 전 치안감은 뇌물 수수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성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A 전 치안감은 "승진 청탁과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성씨의 진술만에 의존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관계를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승진 청탁 시기와 방법, 돈을 건넨 경위 등 진술이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민현기 기자

헤어진 연인 상대로 집단 성폭행한 10대 구속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또래와 집단 성폭행한 10대가 구속됐다.

16일 광주 서부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께 광주 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친구인 B·C군과 함께 D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전 여자친구였던 D양을 포함해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게임 등을 빌미로 D양을 만취하게 만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숙박업소 주인의 눈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둔 채 따로 입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D양의 지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

에 나선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은 B·C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도주하던 A씨는 지난 12일 광주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노숙을 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고려해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 14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정상이 기자